

금융 대전환의 기반을 다진 1년, 본격적인 성과창출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선도하겠습니다.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 -

- ①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 전환**의 기반 마련
☞ 만성적 박스피 탈피, **코스피 7,981pt** 달성('26.5.14일 종가)
- ② 대한민국 20년 미래성장동력을 책임질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 메가프로젝트 등 **11건 8.4조원**(지방 7건, 4.6조원) 지원 승인
- ③ **지방우대금융** 마련을 통해 지방의 혁신과 성장 뒷받침
☞ 정책금융('28년 45%), 국민성장펀드(40% 이상) 지방공급 목표 설정
- ④ 금융회사 자본규제 개편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
☞ 금융권 **5년간 1,242조원** 공급, '26.1분기중 **92조원 집행** 완료
- ⑤ 포용·동행의 금융을 위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 확대
☞ 정책서민금융 금리 '**한자리대**'로 인하(15.9% → 3~6%^{최저신용자} 등)
- ⑥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장기연체채권 신속·과감하게 정리
☞ **8.4조원**(66만명) 매입 → **사회취약층 1.8조원**(20만명) 우선 **소각**
- ⑦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강력 대응
☞ (**불사금**) 초고금리(금리 60%↑) 계약 원천 무효, 원스톱 피해지원 등
(**보이스피싱**) 전년 동기 대비 **발생건수 △31.6%**, **피해액 △24.6%** 감소
- ⑧ 12회에 걸친 현장의견 청취 거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143만명), 금리경감 3종 세트, 10조원 규모 자금지원,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등
- ⑨ 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관리, **중동상황** 대응 시장안정조치 등
- ⑩ 국민 실생활 **체감형 금융상품** 도입으로 국민편의 제고
☞ **청년미래적금**, **사망유동화 보험**,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등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석원)는 2026년 5월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중점 추진하였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 부동산 중심 금융과 절연,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가속화 >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중심 금융과 과감히 절연을 선언하고 국가경제 내 자금의 물길을 생산적 분야로 가속화하였습니다.

①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 전환의 기반 마련

특히, 현 정부는 대통령 첫 현장방문('25.6.11일)이 한국거래소였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에 높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주보호(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등을 위한 제도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성적 박스피 구간에 갇혀있던 코스피는 1년 만에 장중 8천 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의 구조적 분기점에 진입하였습니다.

② 대한민국 20년 미래성장동력을 책임질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또한,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투자전쟁에 맞서 대한민국 20년 성장동력을 책임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25.12월)하였습니다.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 13건을 신속하게 선정하고, 11건의 프로젝트·기업에 8.4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7건, 4.6조원을 지방사업에 지원하고, K-엔비디아 육성·소버린 AI 등 미래첨단산업에 1.2조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③ 지방우대금융 마련을 통해 지방의 혁신과 성장 뒷받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혁신과 성장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고자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25.10월)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지방 공급목표를 2025년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해 국민성장펀드는 54.7%, 정책금융기관은 44.1%('26년 목표 41.7%)를 지방에 투자집행하여 목표를 초과이행 중입니다. 민간금융권은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기업 : 85%→80%, 개인사업자 100%→95%)하여 지방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④ 금융회사 자본규제 개편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

한편, 두 차례에 걸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1차 80.7조원, 2차 98.7조원)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으로 약 1,242조원(민간 616조원+ 정책 62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 해 1분기에만 모험자본 9.9조원을 포함하여 92조원을 신속하게 공급하였습니다.

<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 >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구조적 전환 노력을 지속하며,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신속·과감하게 지원해왔습니다.

⑤ 포용·동행의 금융을 위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 확대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최저신용자 3~6%, 햇살론 특례보증 9.5% 등 한자리대로 인하하여 금융소외계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청년(청년미래이음대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생계자금대출)에 대한 4.5% 저금리 상품도 출시('26.3월)하여 금융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⑥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장기연체채권 신속·과감하게 정리

아울러,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조치로 장기연체를 신속·과감하게 정리하여 ‘오래된 빚쟁이 딱지’를 제거하였습니다. 새도약기금을 출범('25.10월)하여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 8.4조원을 신속히 매입하여 즉시 추심을 중단하였고, 이중 지원이 시급한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권 1.8조원을 우선적으로 소각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 수당자)

⑦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강력 대응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초고금리(年 이자율 60% 초과) 불법사채는 원금·이자를 원천 무효화하였고,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26.3월~)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등 탐지역량을 강화하였고, 이후 전년 동기('24.10월~'25.2월) 대비 피해건수가 대폭 감소(전년 대비 △31.6%)하였습니다.

⑧ 소상공인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12회에 걸친 간담회 등 소상공인 현장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②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 상황을 고려하여 ③10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④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

마지막으로 정부는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국민 체감형 금융상품 마련 등 국민으로부터 금융권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⑨ 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실수요 보호, 투기수요 차단 등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수준을 강화하였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상황 발생 이후 시장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100조원+a 등 즉각적인 시장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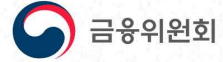
⑩ 국민 실생활 체감형 금융상품 도입으로 국민편의 제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도입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청년층에 보다 실효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6월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여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5.22일)하여 기업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향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핵심과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민생·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과제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질적·구조적 변화 방안을 상시 고민하며 금융 대전환의 본격적인 성과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김경호	(02-2100-2831)
			사무관	김재민	(02-2100-2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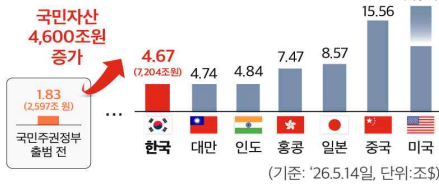


정부 출범 1주년

금융분야 10대 성과

1. 자본시장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

대한민국 증시 시가총액
세계 13위 → 7위권 도약



▶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PBR)도 영국·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승

2.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 본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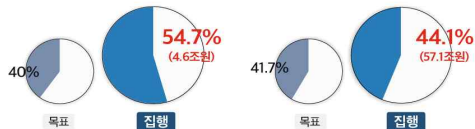
5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11건, 8.4조원 승인 완료

(지방 7건, 4.6조원 / 직접투자 2건, 1.2조원)



3. 지방우대 금융으로 지방혁신·성장 뒷받침

국민성장펀드 지방 투자
54.7%(4.6조원) 집행 중 '목표(40%) 초과'



· 국민성장펀드 지방 투자 · 정책금융 지방 공급
· 은행 지방기업 대출 예대율 규제 완화 : 85%^{과거} → 80%^{현재}

4. '생산적 분야'로 민간금융권 자금 유도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등
'생산적 금융' 인센티브 확충



5.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 확대

정책서민상품 금리 한 자리수대로 인하



미소금융 공급규모 확대

연재 3천억 → '28 6천억
(청년, 차상위층, 성실상환자)

▶ 청년층 대출을 현재 3백억 원 → 3천억 원으로 확대

6. 장기연체 정리 및 연체채권 관리 강화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8.4조원(66만명) 매입

1.8조원(20만명) 소각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



7.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대응 강화

연 이율 60% 초과 불법사금융의
원금·이자 무효화, 원스톱 피해지원 개시



두 달간 피해자 287명 상담
→ 불법추심 1,025건 중단,
채무종결 280건

기관간 정보공유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가상자산 도피 차단



5개월간 26만건 정보공유
→ 419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8.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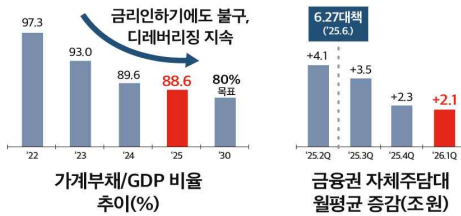
소상공인 현장이견을 적극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 추진

- ① 취약차주 143만명 특별채무조정
- ② 금리경감 3중세트
- ③ 10조원 맞춤형 자금지원
- ④ 시기반 특화 신용평가(SCB) 도입



9-①.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관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 등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9-②. 중동상황 비상대응

중동상황 발생 이후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가동



정책금융 7.5조원
+
은행 25.1조원 *5.15일 기준

- 정책·민간 금융권 합산 약 32.6조원 자금 지원
 - 금융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생금융' 노력 추진
- *보험료 할인, 주유평화카드 추가 할인, 화물차 할부금융 만기연장 등

10-①. 국민생활체감형 청년미래적금(6월 출시)

청년층에게 보다 실효적인
자산형성 기회 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추가 인센티브
(기여금 12%) 부여

10-②. 국민생활체감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자산으로 전환
노후 생활 소득 지원



사망보험금은
사후에만 지급



현재
간병비, 생활비 등
1건당 연 평균
454만원
생전에 수령
노후자금으로 활용

10-③. 국민생활체감형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성과를
국민과 누리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국민모집액)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 대한민국 증시는 시가총액 세계 13위 → 7위권*으로 올라섰으며,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도 주요국 수준으로 상승

* [시가총액] '25.6.2일 (2,597조원) → '26.5.14일 (7,204조원)

[주요국PBR, 26.4.30]: 韓 2.93, 日 2.03, 英 2.31, 中 1.58, 대만 5.45 인도 3.66

1. 주요 성과

- 이재명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에 대해 높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
 - 대통령 첫 현장 방문('25.6.11일)이 한국거래소였으며, 이 자리에서 주가조작 근절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
- 이 과정에서 한국 증시의 정상화가 진행되며 “디스카운트 → 프리미엄”으로의 구조적 분기점에 진입
 - 정부 출범 이후('25.6.2.~'26.5.14.) 코스피 상승률 +195.7%
 - * 코스피 지수: ('25.6.2.) 2,698.97p → ('26.5.14.) 7,981.41p
 - 시가총액 규모는 세계 13위 → 7위권으로 상승
 - * 시가총액(코스피+코스닥+코넥스) : ('25.6.2.) 2,597조원 → ('26.5.14.) 7,204조원
 -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도 영국·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승*
 - * 주요국 PBR('26.5.11일): 韓 2.93, 日 2.03, 英 2.31, 中 1.58, 대만 5.45 인도 3.66

2. 향후 계획

- 선진 프리미엄 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해 4대 정책방향*에 따라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지속 추진

- * ① [신뢰] 주가조작·분식회계 근절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② [주주보호] 중복상장 원칙금지, 낮은 주가방치 방지 등 주주가치 보호
 ③ [혁신]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 본격가동,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 혁신 기업 성장을 위한 코스닥 시장 개편
 ④ [시장접근성 제고] 국내외 자금의 투자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

◆ 우리경제의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프로그램인 5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속도감있게 집행

* ['26. 1~4월간 승인실적] 11건, 8.4조원 (특히, 지방사업 7건, 4.6조원(54.7%))

1. 주요 성과

- 첨단산업을 둘러싼 패권·투자전쟁에 대응,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향후 20년을 이끌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국민성장펀드* 출범('25.12)
※ 첨단전략산업기금(5년간 75조원, 마중물) + 민간금융 연기금·국민자금(75조원) 등 총 150조원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2차 메가프로젝트 선정
 - 4개월만에 8.4조원(11건)이 승인되는 등 규모·속도감에서 차별화
 - 생산적 활동의 비용을 낮추고, 민간도 첨단·생산적 분야로 체질전환
- RWA 규제완화 및 면책부여를 통해 민간의 실질적 참여유인 제고
- “민간의 선구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간접투자방식도 개선('26.4)
 - 차별화된 펀드 구성*를 통해 ‘투자의 공백을 메우는 자금’ 지원
* 대규모 스케일업, 10년 이상 초장기기술투자펀드, 회수시장지원, 지방전용펀드 등
 - 피투자기업의 근본적 가치상승을 이끌 운용사 선정*·평가기준 혁신
* 도전리그, 스케일업펀드, M&A전용펀드, 코스닥펀드, 지역전용펀드 분야 등

※ [출범 후 4개월 대표 집행실적] 산업 파급효과+지방성장 사업 적극 발굴

- ① (신안우이 해상풍력: 3.4조원)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 장기간 사업추진이 더뎠던 사업에 금융비용 절감 지원, 사업추진 가속화
- ② (평택 AI반도체 생산기지: 2.5조원) AI 국가대항전의 핵심전장인 초대형 HBM 공장
↳ 설비 조기가동(30년→28년), 2,000억원 규모 협력업체 상생프로그램 신설 유도
- ③ (리벨리온·업스테이지 직접투자: 1.2조원) 전례없는 수천억원대 직접 지분투자
↳ 차세대 AI반도체 및 소버린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자금 지원

2. 향후 계획

- 정부부처*-민간과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딜 발굴 채널 확대
* 금융위,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문체부, 기후부, 식약처, 방사청
- 年 30조원 이상 적극 집행하여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 온기 확산

- ◆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방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
- ◆ 국민성장펀드 지방 투자 : 40.0% 이상^{목표} → 54.7%(4.6조원)
- 정책금융 지방 공급 : 41.7% 이상^{목표} → 44.1%(57.1조원)
- 은행 지방기업 대출 예대율 : 85%^{과거} → 80%^{현재}

1. 주요 성과 (※ '25.10월,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국민성장펀드) 총 투자액(5년 150조원) 중 40% 이상 지방 지원 목표

→ '26.1~4월까지 지역 사업*에 54.7% 투자 승인**하여 목표 상회

* 신안우이 풍력발전(전남), AI데이터센터(세종), 구형흑연제조공장(전북) 등

** 투자 승인/지방 사업(금액/건) : 8.4조원 / 4.6조원[54.7%], 11건 / 7건

- (정책금융)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 시행('26년 41.7%)

* 연도별 목표(%) : ('25) 40.0 → ('26) 41.7 → ('27) 43.0 → ('28) 45.0

→ '26.1~3월까지 정책금융 지방공급 비중은 44.1%로 목표 상회

* 기관별 실적 : (산은) 46.9% (기은) 37.3% (신보) 47.7% (기보) 49.4% [총 57.1조원]

- (민간금융)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규제 완화 추진

→ '26.4월부터 은행 지방 대출에 대해 완화된 예대율 규제* 적용

*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 완화 : 기업(85%→80%), 개인사업자(100%→95%)

2. 향후 계획

- 정책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금융 지방공급 성과 주기 점검

* (주재) 금융위 부위원장, (참석) 각 부처,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

-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지방우대 정책금융 지원제도 지속 홍보

* 예) 6.11일 「정책금융 同行 in 대전」 행사를 통해 정책기관별 지방우대 정책금융 소개

-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추진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인프라 지원 등

*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5.12월,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성과 4

'생산적 분야'로 민간금융권 자금 이동

- ◆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등 생산적 금융 인센티브 확충
- ◆ 금융권은 5년간 1,242조원 공급 예정으로 92조원 집행('26.3월)

1. 주요 성과

□ 자금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25.9월, '26.4월))

- (은행) 글로벌 기준 대비 엄격한 국내규정 합리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위험가중치 관련 규정 등 개선

- ① 주담대 신규취급시 적용하는 RW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26.1월)
- ② 비상장주식 RW를 원칙400%, 예외250%에서 원칙250%, 예외400%로 변경('26.3월)
- ③ 정책 목적 주식·펀드는 RW를 100%로 특례 적용('26.3월)
- ④ 해외점포 출자금 등을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승인하고 시장리스크 산출시 제외('25.2월~)
- ⑤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된 손실사건은 심사 통해 운영리스크 산출시 배제('26.4월~)

- (보험) 실질적인 위험 수준에 비례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위험계수 합리화('26.2분기내 규정개정 추진)

- ① 정책펀드 투자 시, 위험계수를 경감하고 장기보유 특례 허용(49→20% 이하)
- ② 비상장주식 수준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등 비전통적 인프라의 위험계수 경감(49→20%)
- ③ '적격 벤처' 투자 시 상장주식 수준의 위험계수 적용(49→35%) 등
- ④ 은행권 수준에 맞추어 주담대 위험계수 조정(LTV 60~80% 구간 3.5→4.0%)
- ⑤ 매칭조정 제도(장기투자 인센티브), 내부모형 도입(자체통계 활용 위험액 산출) 등

□ 자본규제 완화로 증가된 금융사 여력을 기반으로, 조직·인력·산업연구 역량을 확충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

- 향후 5년간 금융권은 약 1,242조원(민간 616조원+정책 626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92조원(민간 60.5조원+정책 31.5조원) 집행('26.3월)
- 이에 따라, 기업대출 및 투자 잔고의 규모·비중이 증가(+95조원, +2.8%p)하는 등 금융권의 전반적인 자금흐름 변화

* '25.6말 대비 '26.3말 5대지주+산·기은의 기업대출 및 투자 잔고 증가(1,782조원 →1,877조원, +95조원), 전체 대비 자금 비중도 증가(67.8%→70.6%, +2.8%p)

2. 향후 계획

□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자본규제 합리화로 늘어난 자금공급 여력이 생산적 부문에 충분히 공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개선 과제 발굴

성과 5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 확대

◆ 저신용·저소득 서민 지원상품의 금리 한자릿수대로 인하

* ('26.1월) 햇살론 특례보증: 15.9% → 9.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15.9% → 6.3% 인하
(26.4월)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4.5%) 출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대출(3%) 확대

◆ 미소금융 공급 확대(年 現 3천억 → '28 6천억)를 통해 금융소외자(청년, 차상위계층, 성실상환자) 지원상품 확대

* 청년층(34세 이하) 대출공급을 現 10%(3백억) → 50%(3천억)로 확대

1. 주요 성과

□ 저신용·저소득 서민 지원상품의 금리를 한 자릿수대로 인하

- 햇살론 특례보증* (15.9% → 완제시 9.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15.9% → 완제시 6.3%) 등 최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경감

* (대상)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 신용 하위 20% 이하 (한도) 1,000만원 이내

** (대상) 햇살론 특례보증과 동일(단 연체자·소득증빙곤란자 포함) (한도) 100만원 이내

- 금융취약계층 대상 저금리 생계자금대출(4.5%, 500만원 內) 출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대출(3%, 1,500만원 內) 확대(연 1,200억 → 4,200억)

□ 미소금융 공급규모 확대*를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상품 확대

* 미소금융 연간 총 공급규모를 現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 중

①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진입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 출시('26.3월)

※ (대상) [신용 하위 2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등] & [34세 이하] (금리) 年 4.5% (한도) 500만원 이내 (상환) 거치 6년,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② 정책서민금융을 성실 상환한 분들에게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출시('26.3월)

※ (대상) [차상위계층 ↓ or "신용 하위 50%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전세사기피해자 등 (금리) 年 4.5% (한도) 500만원 이내

2. 향후 계획

□ (향후 추진계획) 우리 금융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 (일정) '26.6월 중 킥오프

◆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8.4조원(66만명) 매입, 1.8조원(20만명) 소각****

- * 5천만원 이하, 7년이상 연체 개인(또는 개인사업자) 무담보 채권
-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 수급자)

◆ **채무조정, 채권매각, 시효완성 등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

- * [5대 시중은행 점검결과] ① 자체 채무조정 : ['25.1/4] 989건→['24/4] 3,456건
- ② 연체채권매각 : ['25中] 3.5만건→['26.1/4] 11건 (새도약·새출발기금 매각 제외)
- ③ 시효완성·소각 : [직전3년 분기평균] 2,229건/598억 → ['26.1/4] 7,676건/2,882억
- ※ 금년중 총 3,351억원 장기 미회수 특수채권 소각 (신한 2,694억 KB 335억 우리 322억)

1. 주요 성과

- (장기연체 정리) '25.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5천만원 이하, 7년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소각 추진

< 새도약기금 주요 현황 ('26.4월말 기준) >

- (가입) 대상기관(금융기관, 공공기관) 2,753개중 2,736개 가입(99.4%)
- (매입) 대상채권 8.4조원(66만명) 매입 (당초 목표 113조원 대비 51%)
- (소각)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한 사회취약계층 등 1.8조원(20만명) 우선 소각

- (연체채권 관리) 그간 금융권이 유지해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발표('26.2.26)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 >

- (채무조정) 자체 채무조정, 매각, 소멸시효 관련 금융회사별 점검·공시 시스템 마련
- (채권매각)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금융회사에게 고객 보호책임을 부여
- (소멸시효) 시효완성 조건부 대손승인, 지급명령 공시송달특례 폐지

2. 향후 계획

- 새도약기금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대상채권을 매입·소각하고, 개인연체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26.2월) 후속조치 추진

- (장기연체 정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지속 매입해 나가고, 상환능력 심사와 소각 신속 추진 (3분기 심사*, 4분기 소각)

* 새도약기금이 채무자 금융자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26.8월)

- (연체채권 관리) 금융회사별 점검·공시 시스템 마련('26.2분기 실적부터 공시) 및 「금감원업무세칙」 등 개정*(~'26.2분기)

* 시효완성 조건부 대손승인 도입으로 시효완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효연장으로 인한 채무자의 추심 고통 지속 및 장기 연체자 양산 방지

성과 7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대응 강화

◆ **[불법사금융] 연 이자율 60% 초과 불법사금융의 원금·이자 무효화**(‘25.7.22.~) 및 **원스톱 피해지원 서비스 개시**(‘26.3.9.~)

* 약 2달간(‘26.3.9.~4.30.) 피해자 287명 상담 → 불법추심 1,025건 중단, 채무종결 280건

◆ **[보이스피싱]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25.10.~) 및 **가상자산 도피차단 등 빈틈없는 피해구제 추진**

* 5개월간(‘25.10.~‘26.3월) 26만건 정보공유 → 419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전예방

1. 주요 성과

□ (불법사금융) 불법사채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구제

○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불법사채*는 원천 무효화(‘25.7.22.~)

*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계약, 초고금리 계약

○ 한 번만 신고하면 전담자를 배정하여 원스톱 지원(‘26.3.9.~)

- **초동** 불법사채업자에게 ‘정부’의 개입을 경고하여 추심 중단
→ **후속** 법률지원에 더해 채무조정, 고용·복지상담까지 지원

※ 약 2달간(~4.30.) 피해자 287명 상담 → 불법추심 1,025건 중단, 채무종결 280건

□ (보이스피싱) 사전에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한 제도기반 마련

○ 금융·수사·통신정보 공유 및 AI 분석 등을 통해 의심거래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자금 환급 등 지원(‘25.10월~)

※ 5개월간(‘25.10.~‘26.3월) 26만건 정보공유 → 4,821건 지급정지·419억원 피해예방

○ ①가상자산 통한 자금도피 차단, ②조직상선 검거 유인체계 마련 등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①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와 동일수준의 보이스피싱 의무 부과(‘26.10월 시행예정)

② 범죄조직공범 제보시 형량감면하여 내부자 정보제공협조 유도(‘26.5.13일 정무위 통과)

2. 향후 계획

□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집금계좌 동결 등 광범위한 범죄수단 차단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추진(‘26.上)

□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등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책임 법제화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 추진(‘26.上)

※ 개정안 발의(‘25.12월, 강준현·조인철의원) → 상임위 상정 등 입법진행중(‘26.3월~)

성과 8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 ◆ **소상공인 현장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①채무조정, ②금리경감, ③자금지원, ④신용평가 개선 추진**

1. 주요 성과

- 소상공인 현장의견을 적극 청취(25.3분기, 12회)하여 ①채무조정, ②금리경감, ③자금지원(10조), ④신용평가 개선 추진

- ① (채무조정) 고금리로 누적된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차주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1.4조원, 2차 추정)

- ① ①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및 ②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원금감면 확대로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1.1조원)
- ②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성실히 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0.3조원)
- ③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금액 상향(희망리턴패키지, +171억)

- ② (금리경감)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개인사업자 대출) 및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확대(+상호금융)

* 개인사업자 비대면 신청채널 확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 등

- ③ (자금지원) 총 10조원을 창업(2.0조원), 성장(3.5조원), 경영애로(4.5조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

- ④ (신용평가) 매출·업종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방안 발표('26.4.9.)

* 매출, 업종, 근로자수, 사업업력, 플랫폼 성장지수(방문/재방문, 북마크 등 종합) 등 활용
→ 높은 성장등급(예: S10등급 중 상위 S1~S2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 금라한도 등 우대

2. 향후 계획

-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용평가 고도화*, 채무조정, 금리경감, 자금지원 등 지속 추진

* SCB: 7개 은행 소상공인대출(1.8조원) 시범운영('26.8월~) → 쏠 은행권 확산('27년중)

성과9-1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관리

◆ 실수요 보호, 투기수요 차단 등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수준 강화**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 등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1)98.7, ('22)97.3 ('23)93.0 ('24)89.6 ('25)88.6

** **全 금융권 자체주담대 월평균 증감(조원): ('25.2Q)4.1 ('25.3Q)3.5 ('25.4Q)2.3 ('26.1Q)2.1**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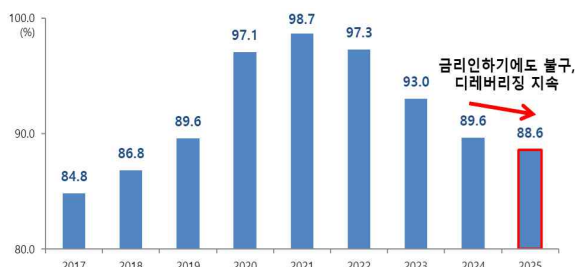
1. 주요 성과

□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차단한다는 원칙 下 가계부채 관리수준 강화* (6.27, 10.15대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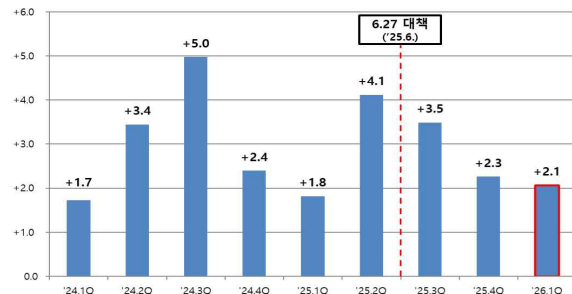
* 다주택자 주담대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 갭투자 제한(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

□ 금리인하, 주택시장 과열 등 녹록치 않은 대외환경 하에서도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 감소 중

< 우리나라 가계부채/GDP 비율 추이(%) >



<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조원) >



2. 향후 계획

□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뒷받침

① (총량관리)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 지속**

*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30년까지 80% 수준**으로 하향 ('25년 88.6%)

② (투기수요 제한) 강화된 관리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되,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방안도 검토 추진

③ (불법행위 점검) 사업자대출의 주택구입목적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관련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지속

* 금감원·금융권 점검을 통해 기한이익상실, 적발정보 신청원 등록, 신규대출 제한 등 조치

◆ 중동상황 발생 이후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가동하여
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 정책·민간 금융권 합산 약 32.6조원 자금지원(~5.15일) 및
금융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생금융 노력 추진

* 보험료 할인, 주유특화카드 추가 할인, 화물차 할부금융 만기연장 등

1. 주요 성과

① 정책·민간 금융권이 함께 현장의 금융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도의 금융지원 추진

○ (정책)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25.9조원 규모)
7.5조원(신규자금 6.0조원 + 만기연장 등 1.5조원) 집행(~5.15일)

- 주요산업·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등 통해 금융애로 등 청취·해소

* (4.7일)정유·석화 (4.8일)건설 (4.10일)의료 (4.17일)철강 (5.21일)해운 등

- 석화기업 나프타 수입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지원체계* 구축(4.23일~)

*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참여, L/C한도 상향 신청시 신속 심사·한도상향 지원 등

○ (민간)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자금지원·상생금융 노력 추진

- (은행) 신규 자금공급(목표 53조원+a) 등 약 25.1조원(신규대출
11.0조원 + 만기연장 14.1조원) 자금지원(~5.15일)

-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지원 등 추진

* 차량 5부제 동참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배달기사 자기신체보험 보험료 할인 등

- (여전) 화물차 할부원금 만기연장·상환유예(2,543대·2,833억원),
주유특화카드 결제시 캐시백·할인(42만건·20.7억원) 등 추진

②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100조원+@)를
즉시 가동하여 5.1조원(~5.15일) 적극 집행

2. 향후 계획

□ 관련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금융지원 및 시장
안정 프로그램 즉시 확대 → 빈틈없는 대응체계 지속 유지

◆ 청년층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출시(6월)**

◆ 지원 필요성이 큰 **중소기업 재직자** 및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 부여**

- * **[일반형]** ①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중위 소득 200% 이하 소득자③ 동시충척의 본인 납입금에 대해 **정부 기여금 6%** 매칭 지원
- [우대형]** ①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자③ 동시충척의 본인 납입금에 대해 **정부 기여금 12%** 매칭 지원

1. 주요 성과

□ (지원 강화) 기존 청년 금융상품 대비 만기 부담을 줄이고, 높은 수준의 정부 기여금 및 금리를 제공하여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강화

- * (도약) 만기 5년, 3~6% 정부기여금, 최대 금리 6% 가정시 9.5% 적금 가입효과 ↔ (미래) 만기 3년, 6%12% 정부기여금, 최대 금리 7~8% 가정시 18.2~19.4% 적금 가입효과

□ (포용금융 강화) 일정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신규취업자, 소상공인 청년 등에 추가 지원* 구조를 마련하여 포용금융 강화

- * (정부 지원금) 일반형 6% / 우대형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 12% (소득우대금리)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추가 우대금리(0.5%) 지원

□ (접근성 확대) 총 15개* 기관에서 청년미래적금 취급 예정으로, 청년층의 접근성·선택권 확대 및 안정적 가입 인프라 구축

- *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뱅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 (신규) 수협, 카카오, 토스, 우체국

□ (갈아타기 지원)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 마련

- * 조특법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상태시 가능하며, 특별중도해지 후 미래적금 신규 가입시 ①비과세 혜택 및 ②기존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 지급 ③기본금리+충족 우대금리 지급 등 혜택

2. 향후 계획

□ (공시) 최종 금리는 5월 마지막주(잠정) 은행연 홈페이지 공시

□ (홍보) 주요 SNS, 서금원·취급기관 등 알림톡 발송, 취급은행 홍보채널, 주요포털 배너, IPTV 광고 송출 및 오프라인* 등 쏠 채널 활용

- * 청년 밀집지역 버스노선 버스외부 홍보물 부착, 캠퍼스·산단 내 홍보물 배포

□ (출시) 전산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26.6월)

- ◆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 지원
- ◆ **[Before]**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사후에만 지급 可 → **[After]** 1건당 평균 454만원(月환산 37.9만원) 생전에 수령하여 간병비, 생활비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

1. 주요 성과

- (배경) 고령화와 기대여명 증가 등으로 노후소득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지원* 필요
 - *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에 소득공백 대응 필요
- 주택과 함께 다수 고령층의 주요 자산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있도록 유동화 추진 ※주택연금(역모기지)과 유사
- (경과) '25.10월, 5개사¹⁾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우선 출시 → '26.1월, 전체 생명보험사²⁾에서 상품 확대 출시, 비대면 가입 순차 시행
 - * 1)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 2) 대상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 등은 제외
- (실적) '26.3월말까지 총 2,922건 신청, 132.8억원(초년도 지급액) 지급 ⇒ 1건당 유동화 금액 약 454.5만원(월 환산시 약 37.9만원)
 - 신청자의 상당수는 55세 이상 65세 미만(1,461건, 48.8%)으로, 국민연금 수령개시(65세) 이전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2. 향후 계획

-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상품과 정책 지속 개발
 - 月지급형 상품(현재는 1년치 연금액을 한번에 지급하는 年지급형만 운영) 순차적으로 출시('26.하반기)
 -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보험사 협의를 통해 추진

성과10-3

국민 생활 체감형 금융상품 도입(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성과를 일반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5.22일)**

1.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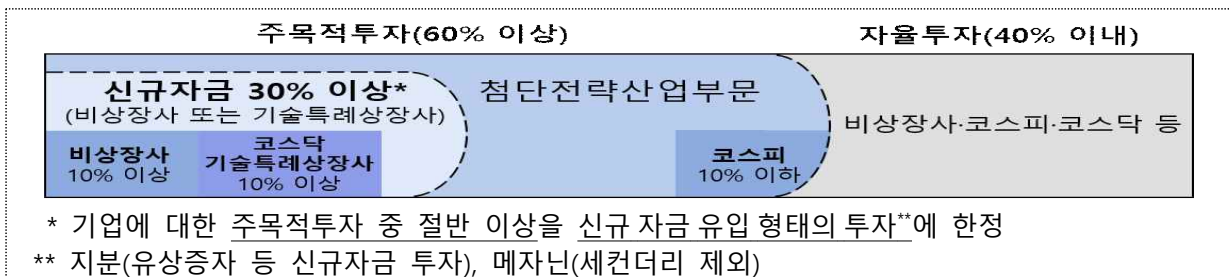
□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5년 만기)의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5.22일)

- * (일정) 5.22일(금)~6.11(목), 3주간 주요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판매
(혜택) ① 투자금액별 소득공제(10~40%)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9%, 지방소득세 포함시 9.9%) 적용
② 재정(1,200억원)이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여 각 자펀드별로 국민투자금의 20% 범위에서 손실 우선 부담

※ (펀드형태) 국민자금을 모아 '공모펀드(모펀드)'를 조성(3개 공모펀드 운용사 선정, 3.13일) 하고, 실제 투자운용은 '자펀드'에서 이루어지는 펀드(10개 자펀드 운용사 선정, 5.6일)

-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12개)에 투자(주목적) 하여 유망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강화
 -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첨단전략산업에 신규자금 공급
 - 이외(40% 이하) 부분은 자율투자를 허용하여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의 수익성 및 안정성 제고 유도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2. 향후 계획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26~'30년까지 5년간 3조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6,000억원 규모의 국민자금을 모집할 계획

- 금년분은 5.22일~6.11일(3주간) 모집 → 펀드 결성(6.12일) 후 투자운용 → 투자집행 현황·성과 등을 모펀드운용사와 함께 지속 점검